

##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Right to Health News at a Glance

2014년 3월 3주차(2014.3.17-3.27)

### 요약(Summary)

1. 제2차 의정협의 '타결'(3/17)
2. 의협, 2차 총과업 유보...의·정 협의안 채택(3/20)
3.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국무회의 통과(3/25)
4. 의협 집단휴진 재논의(3/26)

### ○ 기타뉴스

-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등 국민건강보험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3/24)
- 1인당 연간 건강보험 진료비 100만원 돌파(3/19)
- 건보공단, 담배소송 복지부 반대로 제동 걸리나(3/26)
- 도매업계, 안연케어 매각에 대해 '선 리베이트' 의혹 제기(3/25)
- CJ제일제당 제약사업부문, 4월 1일 CJ헬스케어로 공식 출범(3/21)
- 5개 보건단체 "2차 의정협의, 밀실야합...즉각폐기 해야"(3/27)
- 14개 보험사 고객 개인정보 1만3000건 유출(3/24)
- 약사회,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성분명처방 도입 주장(3/24)
- 우루사 논란, 약사회 중재로 협의안 도출 '일단락'(3/27)
- 서울시, 지하철·버스 성형광고 제한한다(3/26)
- 건보공단, 채동욱 뒷조사 위해 진료기록 무단 조회 논란(3/25)
- 의정협의 총괄 이창준 부이사관, 인구정책과장 임명(3/25)
- 히타치, 헬스케어 사업 강화..5년내 매출 2배 목표(3/26)

## 1. 제2차 의정협의 '타결'(3/17)

오는 24일부터 6일간 '2차 집단휴진'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간 최종 담판에서 협의안이 마련됐다. 의료계의 요구사항이 대체로 받아들여진 만큼 2차 집단휴진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졌다. 다만 의사협회는 이번 협의 결과를 회원 총투표에 부쳐 찬성표가 많을 경우 집단휴진을 철회한다는 계획이다.

협의 결과에 따르면 핵심 쟁점인 원격진료 도입과 영리 자법인 허용, 건강보험 제도 개선 등 의사협회 요구가 대부분 관철됐다. 원격진료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 결과는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시범사업의 기획과 구성, 시행, 평가 등도 정부와 의사협회가 공동 진행하기로 했다.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설립도 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학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보건단체가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마련,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가장 논란이 됐던 건강보험제도 개선 문제는 의료수가(진료비)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공익위원(정부 측 인사)을 가입자(시민단체 등)와 공급자(의료기관)가 동수로 추천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올해 안으로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또 의사협회의 요구대로 의사협회와 건강보험공단의 수가협상이 결렬되면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올해 중으로 만들기로 했다. 현재는 협상 결정시 정부가 결정한다.

이번 집단휴진의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한 대학병원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의 처우개선 방안도 마련됐다. 주 100시간이 넘는 과도한 근무시간 감축 노력을 비롯해 지난 2월 의료발전협의회에서 마련된 개선방안을 구체화했다. 전공의 유급(재수련)제도 폐지와 의사보조인력(PA)의 합법화 추진 중단 등 전공의 요구사항이 대부분 받아들여졌다.

복지부는 "이번에 추가적으로 논의해 마련한 협의결과가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에게 받아들여져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의료계와 정부가 협력을 통해 의료제도와 건강보험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국민건강향상을 위해 기여할 수 있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sup>1)</sup>

## 2. 의협, 2차 총파업 유보...의정 협의안 채택(3/20)

전국 의사들의 총파업 투쟁이 유보됐다. 원격진료 시범사업, 건정심 구조 개선 등 의정협의의 결과가 추진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로 예고된 파업투쟁을 놓고 진행된 전회원 투표 결과, 전체 투표 참여자 4만1224명 가운데 62.16%(2만5628명)의 찬성으로 의정협의의 결과를 수용하고 파업투쟁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의협은 17일 의정협의의 결과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회원들의 수용 여부를 묻는 투표를 17일 오후 6시 부터 20일 낮 12시까지 진행했다.

의정협의는 △원격진료 선 시범사업 △보건의료단체들이 참여하는 투자활성화대책 논의 기구 마련 △

건강심 구조 개선 △수가 결정구조 개선 △일차의료 활성화 등 의료제도 개선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 기구 구성 △심사기준 투명화 등 규제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건강심 구조 개선을 둘러싼 의협과 복지부의 서로 다른 해석과 원격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회의론, 전공의 사안에 대한 방안이 미흡하다는 일부 우려와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의협 회원들은 협의 결과가 대체적으로 의협의 요구사항을 상당 부분 담고 있으며 항목별 구체적인 시행 시기까지 정해져 있어 정부의 진정성을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한 정부의 독주를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고, 의료계의 숙원인 건강심 구조개선을 위해 정부가 법개정을 약속한 것이 의사의 파업 유보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sup>2)</sup>

### 3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국무회의 통과(3/25)

시민사회단체의 반발 속에 정부가 25일 의사-환자 간 원격 의료를 허용하는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원격 의료 도입을 뼈대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17일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원격 진료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조치다. 그간 '선 시범 사업, 후 입법'을 주장했던 의사협회는 최종 합의문에는 '입법에 반영'이라는 문구를 넣음으로써 입법 자체를 사실상 묵인했다. 논란이 된 시범 사업은 '선 입법'하되, 법을 시행하기 전에 실시하는 것으로 가닥이 모아졌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우려를 반영해 법 개정 후 법을 시행하기 전에 시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 부칙에 시범 사업 규정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또 기획·시행·평가 과정에서 의협의 의견을 반영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시범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입법을 먼저 하고 법이 시행되기 직전에 하는 시범 사업은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은 그동안 의료인 간에만 허용됐던 원격 의료의 범위를 의사와 환자 사이까지 확대해 의사가 스마트기기 등으로 환자에게 상담, 교육, 진단, 처방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sup>3)</sup>

### 4. 의협 집단휴진 재논의(3/26)

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의 원인이 된 '원격 진료' 방안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의협이 '정부와의 합의 내용이 기대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며 집단휴진을 재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26일 긴급상임이사회를 열고 정부가 제 2차 의협-정부 간 협의를 계속해 무시하고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지난 18일 제 2차 협의 후 '유보'해 두었던 총파업을 다시 실시하는 방안을 오는 30일 임시 대의원 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의협의 결정은 정부가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원격의료'에 대한 '선 시범사업 후 입법'의 원칙을 어겼다는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복지부가 25일 의료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면서 '공포 후 시행 전 1년동안 시범사업을 한다'는 내용을 그대로 담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곧

의-정이 합의한 '선 시범사업 후 입법'의 원칙을 어겼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즉각 의협에 '차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입법 절차가 완료되어 가고 있었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 시범사업 결과가 반영되면 어차피 수정 될 조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4월부터 6개월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기로 한 것은 변함 없다"며 "협회와 공동으로 시범사업을 충실히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sup>4)</sup>

## 국내 정책

### 1.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등 국민건강보험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3/24)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리베이트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 제한을 가하는 법안이 입법예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등의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25일부터 5월24일까지 6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의 제도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인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를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포함해 가입자 본인부담을 50%로 하되 치과임플란트 비용이 고가이고 부분틀니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해 본인부담상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경우 본인부담을 20%(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30%(만성질환자)로 한다.

리베이트 관련 약제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정지와 적용제외, 과징금 처분의 기준·절차 등이 규정됐다.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리베이트 금액에 비례해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고 적용이 정지됐던 약제가 정지기간 만료 5년 이내에 다시 정지 대상이 된 경우에는 산출된 정지 기간에 2개월 가중 처분하기로 했다.

또한 정지기간 만료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해 산출한 가중처분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할 경우나 가중처분을 받은 약제가 5년 이내에 또다시 위반(3회째)한 경우 요양급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요양급여를 적용 정지하거나 제외했을 때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에 대해서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퇴장방지의약품이란 필수약품의 퇴출방지와 생산장려를 위해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약품으로 정부가 생산원가 등을 지원해 환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보호해주는 품목을 말한다.

이밖에도 요양기관에서 환자가 사고, 부상 등으로 병원을 방문할 때 건강보험 적용여부 확인을 위해 공단에 제출하는 '급여제한여부조회서' 서식을 개정해 내원방법, 발생장소, 발생원인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개정안에 따라 신약의 보험등재 소요기간이 60일에서 90일 정도 줄어들 것을 대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가 종료된 약제에 대해서는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품목(골관절염치료제, 다

발성 경화증치료제, 당뇨병치료제)의 경우 요양급여결정 신청시 허가증(신고서) 대신 식약처의 안전성·유효성 검토 결과서를 우선 첨부할 수 있도록 했다.<sup>5)</sup>

## 2. 1인당 연간 건강보험 진료비 100만원 돌파(3/19)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연간진료비가 처음으로 100만원을 돌파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 건강보험주요통계'를 통해 지난해 건강보험 주요 실적을 발표하면서, 2013년 건강보험진료비는 50조9541억원으로 전년 47조8392억원 대비 6.5%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연간진료비는 2006년 60만원에서 지난해 102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건강보험적용인구는 4999만명이었으며, 이중 직장적용인구는 3501만명으로 전체 적용인구의 70%를 넘어섰다. 직장적용인구는 2006년 전체인구의 60%를 점유했으나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직장가입자 증가 때문으로 경제활동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중장년층 취업 증가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외국인의 건강보험적용인구도 2006년 27만명(전체 0.57%)이었으나, 지난해 64만명(전체 1.28%)으로 증가했다.

80세 이상 적용인구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37만5077원이었다. 이는 전체 적용인구 1인당 월평균 진료비 8만5214원의 4.4배에 달했다. 전체 진료비 50조9541억 원 중 50대 진료비가 1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sup>6)</sup>

한편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빅5 병원에 지급한 요양급여비가 전체 상급종합병원의 약 35.7%(총 2조 2903억원)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체 의료기관에 돌아간 진료비에서도 7.8%에 이르는 수치다.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2006년 1조3765억원에서 2013년 2조7880억원으로 102% 증가했다. 이 기간 의료기관 종별 점유율을 보면 병원급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의원과 약국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실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료비 점유율은 2006년 37.2%에서 2013년 47.4%로 늘었다.

요양병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최근 7년 새 무려 9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에 빅5 병원의 진료비 점유율도 2배 이상 증가했다. 요양병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2006년에서 2013년까지 7년 새 무려 89% 늘었다. 반면 의원과 약국은 같은 기간에 각각 26%에서 21%, 28.3%에서 23.3%로 줄었다.<sup>7)</sup>

## 1. 건보공단, 담배소송 복지부 반대로 제동 걸리나(3/26)

4월 중 소송 제기를 목표로 내달렸던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에 제동이 걸렸다. 26일 건보공단은 담배소송 규모(소송액)를 확정하고 소송을 맡을 외부 대리인(변호사)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었지만 이를 돌연 취소했다. 이는 감독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가 건보공단이 담배 소송에 들어가기 앞서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오늘 소송 대리인 선임 공고를 낼 예정이었지만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어 소송대리인 선임 공고는 취소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담배 소송에 있어서 신중론을 펴왔던 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다시 한번 제동을 건 것이다.

복지부와 기재부는 지난 24일 임시이사회에서도 "담배 소송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담배의 결합과 담배회사의 위법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건보공단은 4월 중 KT&G와 필립모리스 등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537억원에서 최대 2302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세운바 있다. 소송 대상은 매출액과 분담금 규모 확인해 일정 매출 이상인 담배회사를 고려해 변호인단 구성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sup>8)</sup>

## 2. 도매업계, 안연케어 매각에 대해 '선 리베이트' 의혹 제기(3/25)

연세대의료원이 의약품 납품권을 대기업 계열인 아이마켓코리아에 대한 매각을 한 것을 놓고 도매업계에서 '선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연세대재단 직영 도매업체인 안연케어의 51% 지분을 750억 원에 인수한 소모성자재 구매대행업체 아이마켓코리아는 4월부터 안연케어를 통해 연세의료원에 약품 공급을 시작한다. 아이마켓코리아는 연세의료원과 13년간 의약품 독점 공급권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매업계 일각에서는 연세대의료원이 아이마켓코리아에 의약품 독점 공급권을 매각한 것을 놓고 리베이트를 받은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공익재단 성격이 강한 연세대재단이 의약품 납품권을 750억원에 매각했다는 것은 사실상 선지급 형태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서울의 모 도매업체 대표는 "안연케어 지분 매각은 미래가치에 대한 투자 성격이 짙고 약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선지급 형태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며 "연세대의료원의 안연케어 지분 매각은 합법적 리베이트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연세대재단처럼 합법적으로 리베이트 수령이 가능한 직영도매 지분 매각이 일반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우려했다.<sup>9)</sup>

### 3. CJ제일제당 제약사업부문, 4월 1일 디헬스케어로 공식 출범(3/21)

CJ제일제당 제약사업부문이 내달 1일 'CJ헬스케어'로 새롭게 태어난다. CJ제일제당은 21일 서울 중구 CJ제일제당센터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CJ헬스케어를 제약 신설법인으로 설립하는 안건을 최종 확정했다.

4월 1일 CJ그룹의 제약 전문계열사로 공식 출범할 CJ헬스케어는 현 CJ제일제당 김철하 대표와 CJ제일제당 제약사업부문 곽달원 대표(부사장)가 각자대표를 맡게 된다.

CJ헬스케어는 약가인하, 허가 특히 연계제도 등 다양한 제도 시행으로 급변하는 제약산업 환경에서 신속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과 적극적인 R&D 투자로 전문 제약기업으로서 역량을 강화하여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sup>10)</sup>

### 4. 5개 보건단체 "2차 의정합의, 밀실야합...즉각폐기 해야"(3/27)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2차 의정합의로 원격의료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5개 보건의료단체가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5개 보건의료단체는 27일 성명을 통해 "2차 의정합의 결과는 국민건강을 볼모로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의-정간)밀실야합의 산물"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5개 보건의료단체는 "의협은 2차 의정합의를 통해 국민건강권수호를 위해 의료인으로서 책임을 다해 달라는 모든 이들의 바람을 저버리고 건강보험제도 운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눈앞의 이익을 위해 정부의 의료영리화정책에 편승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5개 보건의료단체는 정부의 원격의료, 영리자회사, 법인약국 등 의료영리화정책에 맞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의협의 야합을 비판하는 양심적인 의사들과도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치협, 한의협, 약사회 3개 보건의약단체는 정부와 의협이 마련한 논의기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고 왜곡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국회 여를 비롯해 시민단체, 보건의료단체, 정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제도개선을 위한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천명했다.<sup>11)</sup>

### 5. 14개 보험사 고객 개인정보 1만3000건 유출(3/24)

카드사와 통신사에 이어 보험사의 개인정보도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등으로 질병 정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경찰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최근 14개 보험사에서 개인정보 약 1만3000건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는 보험사와 판매위탁 계약을 맺은 판매대리점이 관리하던 정보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수사당국을 방문해 청취한 결과 유출된 개인정보는 질병정보가 아니라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등의 보험계약정보로 확인됐다”며 “어떤 항목의 정보가 유출됐는지 더 자세하게 파악하고 나서 필요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sup>12)</sup>

## 약계 뉴스

### 1. 약사회,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성분명처방 도입 주장(3/24)

대한약사회는 24일 대한의사협회가 그 동안 원격진료를 전제로 처방조제약 택배배송을 주장해 온 것과 관련해 시범사업 추진을 전제로 성분명처방과 처방전 리필제도를 포함하여 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성명을 통해 약사회는 그 동안 정부와의 논의과정에서 처방약 택배배송 방법의 문제점인 변질, 오염, 분실 등의 문제 등이 도리어 더 많은 환자 불편을 초래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같은 지적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약사회는 “저가조제약 인센티브시스템을 연동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까지 알뜰하게 살필 수 있다는 점과 함께 환자를 위한 마음으로 처방조제약 택배배송까지 주장할 정도의 진정성을 가진 의협이라면 성분명처방과 처방전리필제도를 당연히 수용해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또 국회와 정부에 대해서도 성분명처방 및 처방전리필제 도입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약사회는 당부했다.

한편 의협 노환규 회장은 “의협은 원격진료와 관련해 처방조제약의 택배 배송을 주장한 사실이 없다”라고 분명히 했다. 또한 그는 “약 조제를 위해서는 원격처방전을 받아도 다시 의원 옆에 있는 약국을 방문해야 하는 정부측 원격진료법안의 허점을 지적했다”라고 설명했다. 노 회장은 약사회에서 만약 성분명처방과 처방전리필제 주장을 멈추지 않는다면 의약분업의 본질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sup>13)</sup>

### 2. 우루사 논란, 약사회 중재로 합의안 도출 '일단락'(3/27)

우루사를 둘러싼 대웅제약과 건약간의 갈등이 대한약사회의 중재에 따라 일단락 됐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6일 오후 대웅제약과 건약 리병도 약사와의 입장 차를 조율하는 자리를 갖고 중재안을 도출했다. 이날 중재 자리에서는 리병도 약사가 이번 사안에 대한 유감을 표현했고 대웅제약이 받아들 이면서 합의점을 찾게 됐다.

리병도 약사는 “MBC 인터뷰에서 우루소데옥시콜린산(UDCA) 성분에 대해 설명하였으나 편집 과정에서 인터뷰 의도와 달리 일반의약품인 우루사가 소화제로 인식되는 오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사안과 관련해 대웅제약의 회사 이미지와 마케팅에 있어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웅제약은 “우루사 관련 소송의 의미는 금전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목적이 아니라 잘못된 MBC



인터뷰 내용을 정정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에 있는 것”이라며 “약사회의 중재의지를 존중해 소송을 취하하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했다”고 전했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입장을 조율해 중재안을 도출하고 이번 사안에 대해 상호간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하는데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리병도 약사의 유감 표현에 대해 대응제약이 사과로 언론플레이를 하지 않는 부분과 건약이 아닌 개인적인 입장이라는 점 등이 전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sup>14)</sup>

## 기타 뉴스

### 1. 서울시, 지하철·버스 성형광고 제한한다(3/26)

서울시가 시내 지하철·버스의 성형광고를 대폭 손질한다. 서울시는 25일 지하철의 인쇄물의 성형광고 비중을 역·차량별로 20% 이내로 제한하고 버스의 성형광고 비중도 줄인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까지 광고는 모두 7641건이며 이 중 237건 3.1%가 성형광고이다. 호선별로 보면 강남지역을 통과하는 3호선에 전체 성형광고 중 173건으로 73%나 돼 가장 많았고 ▲7호선 27건 ▲5호선 13건 ▲4호선 11건 순이다. 역사별로는 3호선 압구정역에 전체 성형광고의 45%가 집중돼 있고 ▲신사역 25% ▲역삼·강남역 각각 5.3% 순이다.

서울시는 성형 전후 비교 광고를 금지하고 '티나지 않게', '닭지 마라', '예뻐져라' 처럼 성형을 부추기는 자극적인 문구도 사용할 수 없도록 지하철 공사와 광고 대행사에 통보하기로 했으며 전동차 내부 의료광고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도록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버스 성형광고도 규제할 전망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버스정류소 5715곳 중 음성으로 성형광고를 하는 곳은 26곳이며 버스 하차문을 이용해 인쇄물을 이용하는 사례는 총 7485대 중 70대가 성형광고를 하고 있다. 이에 이미 지난해 7월부터 시내버스의 성형광고 비중을 5% 이내로 유지하도록 광고 대행사와 협의해 시행 중이지만 최근 다시 대중교통 성형광고에 대한 논란이 일자 대책을 강화한 것이다.<sup>15)</sup>

### 2. 건보공단, 채동욱 뒷조사 위해 진료기록 무단 조회 논란(3/25)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청와대 지시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관련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건보공단 소속 직원들을 불러 "지난해 6월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 관계자 부탁을 받고 혼외자로 지목된 A(12)군과 B씨에 대한 진료 기록을 조회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이 건보공단 직원은 지난해 6월 B씨의 출산 시기로 알려진 2002~2003년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무단

으로 조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B씨의 산부인과 진료 기록이나 학적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sup>16)</sup>

### 3. 의정협의 총괄 이창준 부이사관, 인구정책과장 임명(3/25)

그동안 의료계와 의정협의를 총괄했던 이창준 부이사관이 인구정책과장에 임명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과장급 인사를 25일자로 발령냈다고 밝혔다.

신임 이창준 인구정책실 인구정책과장은 최근 의료계 집단휴진 대책과 의정협의를 위해 분주하게 활동해왔다. 한국외국어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이 과장은 행정고시 37회로 관가와 인연을 맺었으며, 기획조정담당관과 보험급여과장, 보험평가과장, 의료자원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sup>17)</sup>

### 4. 히타치, 헬스케어 사업 강화..5년내 매출 2배 목표(3/26)

일본 전자기기 제조업체 히타치제작소가 헬스케어 관련 사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 세계 인구 고령화 추세로 헬스케어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히타치는 24일 도쿄(東京)에서 열린 경영전략 설명회에서 헬스케어 관련 사업을 강화해 앞으로 5년 안에 관련 사업 매출을 지난해 두 배 수준인 6000억엔(약 6조175억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산케이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전자기기 제조업체 히타치는 특히 다른 헬스케어 기업들과 비교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초음파진단 장치와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예방·간호 서비스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IT와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해 혈당치 등 신체 정보를 분석해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의 발병률을 예측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개인의 신체 정보를 모두 수집, 포괄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히타치는 내달 1일 헬스케어 그룹을 설립하고 헬스케어 경영자원을 한 곳으로 집중할 계획이다. 의료 관련 IT사업과 입자선치료시스템 사업 등이 주요 통합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영국 BBC방송은 지난 2009년 1431억달러(약 154조원)였던 글로벌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이 연평균 15.7%의 성장률을 보여 올해 2937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14년 한국 내 20~60대 전체 인구 중 총 1200만명이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며 시장 규모는 약 3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sup>18)</sup>

- 
- 1) ‘醫-政 쟁점 '타결'...의료계 요구 대부분 '관철’, 2014.3.17., <아시아경제>
  - 2) ‘의협, 2차 총과업 유보...의·정 협의안 채택’, 2014.3.20., <프레시안>
  - 3) ‘정부, '원격 의료법' 국무회의 통과 강행’, 2014.3.25., <프레시안>
  - 4) ‘의협, 집단휴진 재논의...“정부, 의-정간 협의 무시”’, 2014.3.26., <시사포커스>
  - 5) ‘75세 이상 임플란트 보험적용 등 입법예고’, 2014.3.24., <뉴스1>
  - 6) ‘1인당 연간 건강보험 진료비 100만원 돌파’, 2014.3.19., <메디컬투데이>
  - 7) ‘빅5 병원 작년 요양급여비 2조3000억’, 2014.3.18., <테일리메디>
  - 8) ‘건보공단, 담배소송 복지부 반대로 제동 걸리나’, 2014.3.26., <파이낸셜뉴스>
  - 9) “연세의료원, 의약품 납품권 매각은 선 리베이트 의혹”, 2014.3.25., <약업신문>
  - 10) ‘CJ제일제당 제약사업부문, 4월 1일 CJ헬스케어로 공식 출범’, 2014.3.21., <파이낸셜뉴스>
  - 11) ‘5개 보건단체 "2차 의정협의, 밀실야합...즉각폐기 해야"’, 2014.3.27., <청년 의사>
  - 12) ‘14개 보험사 고객 개인정보 1만3000건 유출’, 2014.3.24., <국민일보>
  - 13) ‘의협 “약사회, 성분명처방 주장 안 멈추면...”’, 2014.3.25., <메디파나뉴스>
  - 14) ‘우루사 논란, 약사회 중재로 협의안 도출 '일단락'’, 2014.3.27., <메디파타뉴스>
  - 15) ‘서울시, 지하철·버스 성형광고 제한한다’, 2014.3.26., <메디컬투데이>
  - 16) ‘건보공단, 채동욱 뒷조사 위해 진료기록 무단 조회 논란’, 2014.3.25., <아주경제>
  - 17) ‘의정협의 총괄 이창준 부이사관, 인구정책과장 임명’, 2014.3.25., <메디파나뉴스>
  - 18) ‘히타치, 헬스케어 사업 강화..5년내 매출 2배 목표’, 2014.3.26., <이데일리>